

Deloitte Insights

November 2025



미국 약가 인하 정책과 국내 제약 산업 영향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서론	03
미국의 약가정책과 시장의 반응	05
해외약가참조제와 ‘코리아 패싱’이 만나는 지점	07
‘코리아 패싱’과 정책적 악순환 부상하는 ‘위험분담제’	
글로벌 정책 변화에 맞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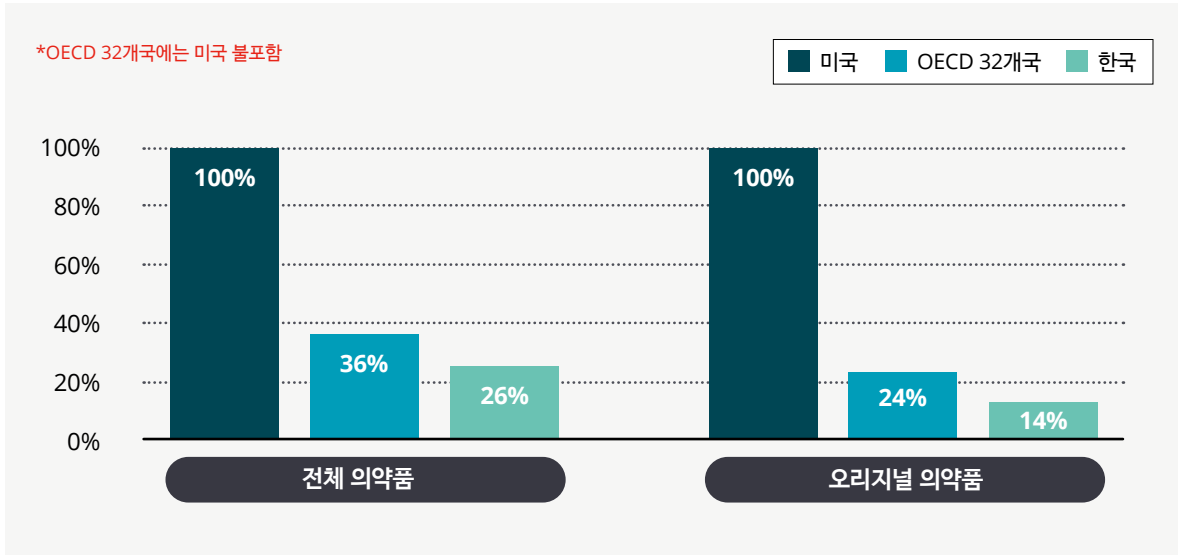


서론

2025년, 미국은 자국 내 의약품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강경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시 논의되고 있는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Most Favored Nation Pricing, MFN)은 약가 인하 정책 중 하나로, 미국 약가를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단순한 약가 조정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와 각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책정 구조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재편이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 세 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 7월 31일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의약품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 미국 공정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코퍼레이션이 2024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32개국 평균보다 약 2.7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그림 1).¹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별로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기술수출 중심의 바이오텍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도입 위축과 R&D 예산 축소로 인해 중장기적인 수익 모델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내 CDMO의 경우 글로벌 제약사의 비용 효율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위탁생산 수요 확대에 따른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바이오시밀러 역시 오리지널 약 대비 가격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최혜국 약가 정책은 단순한 약가 인하를 넘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출 전략과 글로벌 밸류체인 내 위상 등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고는 최혜국 약가 정책이 촉발한 글로벌 약가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약가 정책과 시장 반응 ▲해외약가참조제와 한국 약가 구조의 연동 문제 ▲코리아 패싱 이슈와 정책적 악순환의 리스크 ▲위험분담제(RSA)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1. OECD 약가 수준 비교



출처: RAND Corporation, International Prescription Drug Price Comparisons, Estimate Using 2022 Data. 딜로이트 분석.

1. International Prescription Drug Price Comparisons: Estimates Using 2022 Data, RAND Corporation, 2024

그림 2.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미국 전반적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

국내 이해관계자 분류	미국 약가인하 정책 영향
제네릭 중심 전통 제약사	 부정적 미국은 복제약 시장이 크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편으로, 약가 인하 정책으로 수출단가 하락, 마진 악화, 경쟁 심화 등 수익성 방어 어려워질 수 있음
오리지널 중심 외국계 제약사	 부정적 미국 MFN 정책으로 한국 약가가 참조되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공단과의 약가 협상 가능 범위 축소 및 한국 시장 내 신약 판매를 지연, 포기할 수 있음
CDMO(위탁생산)	 긍정적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용 효율성을 추구하며 생산 외주 확대 가능. 특히 한국 CDMO의 고품질·합리적 단가로 새로운 수주 기회 증가 가능
바이오시밀러	 단기: 부정적  중장기: 기회 미국 약가 인하 시 기존 약가 기반 수익성에 타격. 그러나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고가 오리지널 대비 저렴한 대안이므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며 정부 및 보험사의 채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환경 조성 가능
신약개발· 기술수출 바이오텍	 부정적 미국 제약사가 R&D 예산을 줄이거나 기술 도입을 줄일 경우 기술 수출 기회가 축소될 가능성 존재. 국내 약가가 노출되는 경우 미국 수출 판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CRO(임상 수탁)	 혼재 글로벌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예산을 줄이면 수요 감소할 가능성 존재. 반면 효율적인 임상 운영에 대한 수요는 증가 가능
내수 중심 중소제약사 및 OTC 전문기업	 간접적 미국 약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으나 국내도 약가 제도 개편 압박이 생길 수 있음
한국 정부	 부정적 사실상 '약가 인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현행 건국내 약가 제도에 반하여, 미국의 MFN 정책은 한국 시장 내 약가 인상 압력 내지 신약 도입 지연·포기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 환자)	 부정적 MFN 정책으로 약가참조국에 포함되면 국가별 시장 경계를 통한 약가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의약품비 상승 내지 신약 도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미국의 약가정책과 시장 반응

최근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보건으로 차원을 넘어, 무역 및 산업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해야 할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특히 고관세 정책과 제조업 리쇼어링 의지를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고려하면, 약가 인하는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박 카드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혜국 약가 정책은 미국 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을 OECD 주요국 중 최저가 수준에 맞추고, 제약사가 미국보다 더 낮은 가격에 타국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바이오시밀러-제네릭 경쟁이 없는 고가 의약품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제약사 입장에서 글로벌 가격 전략이 원천적으로 제약될 수 있는 흐름이다. 또 미국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유도하고, 해외 수익을 미국 의료비 절감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정책은 관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약가를 먼저 조정하겠다는 접근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타깃으로 한 구조적 정책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권고'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의약품 유통과 글로벌 가격 구조를 정치-통상 이슈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화 및 실행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7개 글로벌 제약사에 공식 서한을 보낸 이후,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약가 인하 합의가 보도되었고, 11월 들어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의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 합의가 보도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행정명령을 통한 미국의 의약품 정책 개혁 동향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의약품 정책 개혁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복지 프로그램과 글로벌 제약 산업 전반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최혜국 대우 처방약 약가 제도	미국 연방정부가 제약사에 지불하는 브랜드 의약품 가격을 다른 선진국에서 책정된 최저가 수준에 연동하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 약가 정책
'미국 우선' 원칙에 기반한 약가 인하 조치	해당 명령은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약가 관련 이슈를 의회와 함께 추진하도록 지시 • 병원 외래 진료에서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메디케어 지급액 제한 •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가 부과하는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강화* • 340B 프로그램(저소득층 의료지원 약가 할인제도)하에 병원이 받는 약제 할인 지불액 감소 가능성 검토
필수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장려	미국내 제약 생산 역량 강화 를 위해,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규제 장벽을 완화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치를 포함
상호 관세 및 수입 규제	의료제품을 포함한 수입품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통해, 무역 국가와의 불균형 해소 이러한 상호 관세 부과는 각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협상하게 만들었으며, 이 협정에는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에 대한 특수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관세 체계를 통해 적용
의료비용 정보의 투명성 강화	표준화된 가격 정보 및 집행 정책에 관한 최신 지침 또는 규정 제정을 통해, 처방의약품 가격의 투명성 을 강화

출처: 딜로이트 인사이트 분석

*미국의 약가 시장은 PBM이라는 민간 중간거래상(middleman)이 제약사, 약국 및 보험사 사이에서 약가를 협상 및 정산하는 역할을 하면서 margin 및 rebate를 수취하는 구조로, 이는 미국 약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MFN Pricing이 도입되어도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된 PBM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약가 인하의 효익이 미국 국민에게 온전히 귀속될 수 없을 것으로 보는 회의적 견해가 존재함.

그림 4. 미국 규제당국, 2025년~2026년까지 이어질 주요 의약품 정책 이행 본격화

현재까지 완료된 조치	• MFN 약가제도의 적용 범위 정의 및 목표 약가 공표 • 제약사 대상 MFN 관련 지침 발표 • 340B 리베이트 모델 시범사업(Pilot program) 발표 • 일부 의약품에 대해 340B 할인 약가 + 최소 수수료 이하로 책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프로그램 참여 허용 • 메디케어 Part B 약제의 '의료기관 간 수가 형평성 제도'(Site Neutral Payment)와 평균판매가격 산정 방식(ASP)의 변경 사항을 포함한 연간 수가 규칙 발표 • 의약품 가격 투명성 강화와 그에 따른 이행 및 집행 요건 확대 • 의약품 정보를 기계 판독 가능한 파일(MRF) 형식으로 공개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보요청서(RFI) 발표 • 주 정부 대상 의약품 수입 프로그램 승인 절차 간소화 •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 미국내 의약품 제조 심사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발표 •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규정 제언 • MRF 관련해 새로운 '보험 보장 투명성'에 대한 기술적인 상세 요건 발표
2025년 내 예상되는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MFN 정책 우선순위(메디케이드에 MFN 약가 확대 적용, 해외 수익의 미국 재투자 등)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 대응 조치 마감 기한 • 메디케이드 약가 리베이트 정확성에 대한 방안 제언 • 메디케어 Part D 보험료 안정화 방안 제언 • 제약사의 반경쟁 행위에 대한 보고서 발간 •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승인 및 일반의약품(OTC) 재분류 가속화 관련 보고서 발간 • 2027년 OPPS/ASC(외래 진료 선지급 방식/외래 수술 센터) 규정 마련을 위한 메디케어 의약품의 구매 비용 조사 실시 • 제약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제언
2026년 예상되는 조치	2026년 1월 • 340B 리베이트 모델 시범사업 본격 시행 • 비의약품 및 서비스 항목에 대한 340B 지급 조정안이 최종 확정 시 발효 • 평균판매가격(ASP) 산정 방식과 실제 서비스 수수료(Bona Fide Service Fee)의 검증 및 확인 절차에 대한 변경안 최종 확정 시 발효 • 메디케어 Part B 약제에 대한 의료기관 간 수가 형평성 제도 제언안 최종 확정 시 발효 • 메디케어 처방약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프로그램 업데이트안이 최종 확정 시 발효 2026년 2월 • 2028년부터 약가 협상이 실제로 적용될 메디케어 Part B·D 약물 중, 15개 협상 대상 약물 목록 발표 예정 2026년 4월 • HHS(보건복지부), 고가의 처방약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메디케어 지급 모델 개발

출처: 딜로이트 인사이트 분석

해외약가참조제와 '코리아 패싱'이 만나는 지점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를 분석하려면, 우선 우리나라의 약가 결정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단일하게 관리하고 집행하는 '단일 보험자'(Single-Payer)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가 존재하긴 하나, 이들은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처럼 보완적 역할에 국한되며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약가 결정 과정에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여 약가를 정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약가참조제도가 적용된다. 이는 A8 국가(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의 약가를 비교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약값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단일 보험자 체제로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약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이점을 누리고 있다.

'코리아 패싱'과 정책적 약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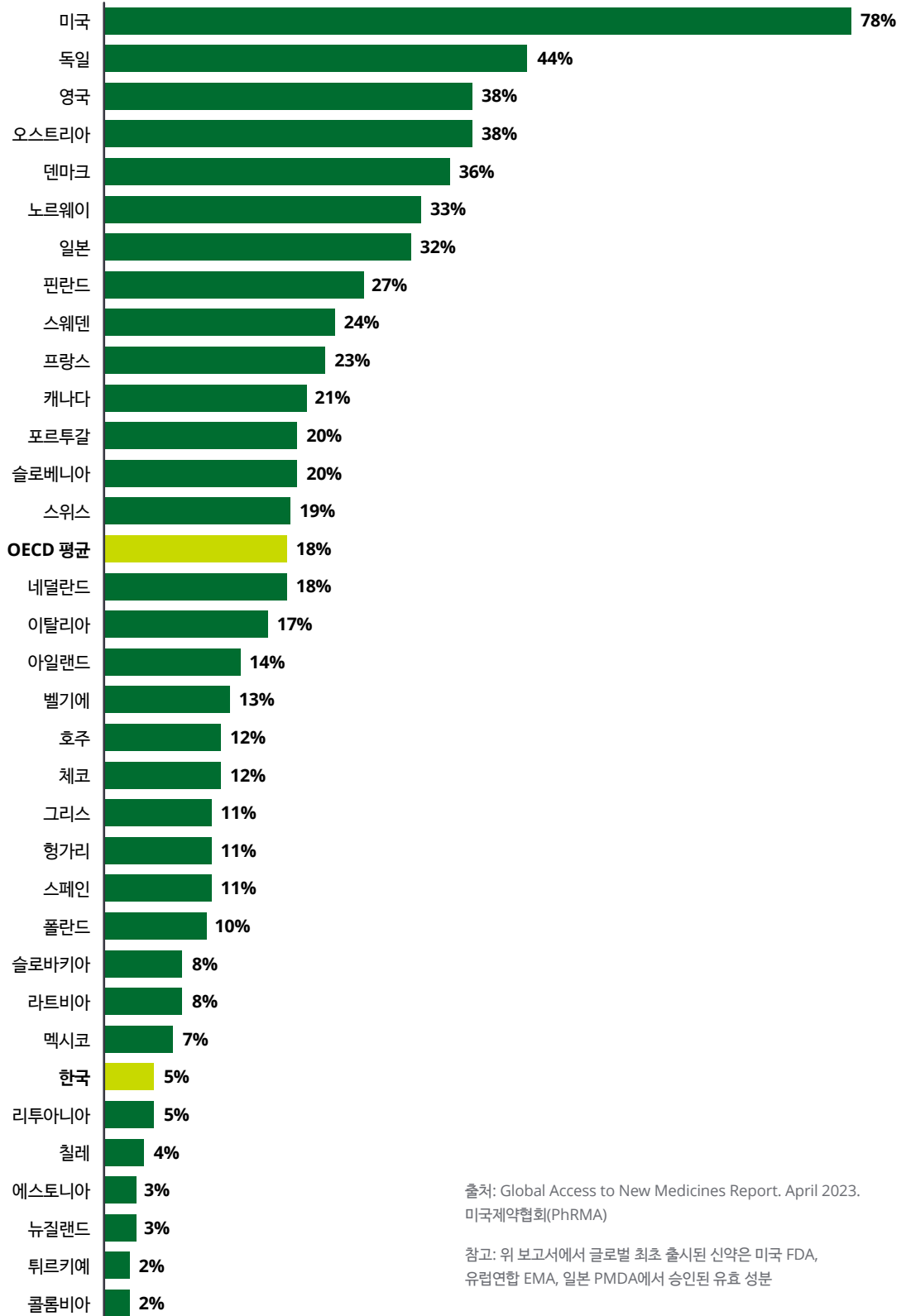
이러한 제도의 이면에도 역효과가 존재한다. 한국의 낮은 약가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약값이 낮게 형성되면 이를 참조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약가 인하 압력이 커지질 수 있으며 이를 우려하는 일부 제약사는 한국 시장에서 신약 출시를 미루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한다. 흔히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 불리는 현상이다. 미국제약협회(PhRMA)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미국, 유럽, 일본에서 처음 승인된 460개 신약 가운데,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한국에 도입된 비율은 5%에 불과했다(그림 5).² 이는 OECD 평균 (1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 일종의 해외약가참조제도 성격을 띠는 미국 최혜국 약가 정책의 참조국으로 한국이 포함될 경우, 미국 약가를 다시 한국이 참조하게 되는 정책적 약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가격 정책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국내 신약 도입 지연 및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 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 April 2023. 미국제약협회(PhRMA)



그림 5. OECD 국가별 글로벌 최초 출시 후 1년 이내 출시된 신약 비율
(2012년부터 2021년 말까지 출시된 전체 460개 신약 기준)



출처: Global Access to New Medicines Report. April 2023.
미국제약협회(PhRMA)

참고: 위 보고서에서 글로벌 최초 출시된 신약은 미국 FDA,
유럽연합 EMA, 일본 PMDA에서 승인된 유효 성분

부상하는 '위험분담제'

최근 국내 제약업계 안팎에서는 고가 신약의 시장 접근성과 국제 약가 연계 이슈를 감안해,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이하 위험분담제)의 적용 범위 및 가격 구조에 대한 조정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험분담제란, 주로 희귀 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등 재정적 부담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보험 적용)로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실제로 공단이 공개하는 고시 가격은 국제 참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실제 재정 집행은 별도 협상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 가격과 공식 약가 간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국제 가격 연계 압력 하에서 한국 제약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일종의 정책적 완충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약사와 공단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된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약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과의 정합성과 공단의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현재 제도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의료 접근성과 건보 지속가능성 간 균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약가 참조국이 될 경우 위험분담제에 대한 유인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조정 구조가 장기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국제 가격 연계정책(MFN 등)이 구체화되고 실거래가 기반의 투명성 요구가 강화될 경우, 지금의 운영 방식이 오히려 구조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운영 방식 개선을 넘어 약가 제도의 구조적 정합성과 약제비 재정 비중의 재조정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도 논의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보험 재정 유지 목적의 약가 인하 목적 환급(Financial Based Reimbursement)에서, 의약품의 실제 효과성에 기반한 성과 기반 환급(Performance Based Reimbursement)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정책 변화에 맞서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미국 약가 인하 정책이 브랜드 의약품을 핵심 타깃으로 삼는 만큼, 영향의 대부분은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연결고리를 통해 국내 기업에도 간접적인 여파로 이어질 수 있다.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낮아지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수익성 방어 압력이 커지고, 그 결과 비용 효율화와 사업구조 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상 개발 단계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기술도입 협상 지연, 생산 아웃소싱 비중 확대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기술수출 기반으로 성장해온 국내 바이오텍이나 CDMO를 중심으로 업황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국 시장에서 고가 혁신 신약의 가격이 제한될 경우, 국내 기업의 수익 창출 시나리오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수밖에 없다. 신약은 개발비용이 크고 성공 확률이 낮아, 글로벌 시장에서의 약가가 투자 회수성과 직결된다. 결국 개발 동기가 약화되면서 R&D 전략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산업 차원에서는 신약 중심 모델로의 전환 속도가 더뎠을 수 있다. 반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분야는 보험자 선택 확대에 따른 우호적인 수요 환경이 기대되지만, 이는 동시에 산업 내 포트폴리오 양극화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약업계는 미국의 약가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약가참조제도 등 글로벌적으로 연동된 약가 책정 메커니즘 속에서, 한 국가의 정책이 타국의 약가에도 연쇄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약가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닌, 기업의 매출, R&D 투자 유인, 영업 전략 전반에 직결되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제약사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제품군 전략, 가격정책, 글로벌 진출 전략까지 전면 재검토할 타이밍이라는 신호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약가 정책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국의 약가 구조와 수익성은 물론이고 수출 약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요구된다.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 역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군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시장 내 입지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 의료경제성 자료 확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이 자료가 약가 협상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므로,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다 유연한 전략이 요구된다. 위험분담제(RSA)와 같은 제도를 포함하여, 약가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가격 전략에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력을 사전에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정부도 보험 재정 방어 위해 약가를 낮춘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약가 제도에서 벗어나, 현재로서는 다소 이상적일 수 있으나 코리아 패싱 방지 및 국내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약제의 효과 측 성과를 재평가하여 적정 약가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약가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제약산업은 이제 단순한 제네릭 생산을 넘어, 기술수출과 신약 중심 R&D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최혜국 약가 정책은 이처럼 미래 중심의 수익 모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수이며, 특히 고가 혁신 신약을 보유한 기업에는 기업가치, 협상력, 투자유치 역량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당사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의약품 가격 전략은 최혜국 약가 정책 이후에도 유효한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이호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 02 6099 4472

@ hojilee@deloitte.com



안종식 수석위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88

@ jongsah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